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 한국경제의 길을 묻는다*



사 회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좌 답 장상환 (대표 발제,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성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일 시 2008년 11월 14일

장 소 국민대학교 국제관

* 이 글은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토론회(2008. 11. 14.)의 마지막 순서인 집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이다.

이병천 이번 학술 대회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해서 앞서 이미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집담회에서는 이런 발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큰 틀에서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향후 대안 논의와 관련해서 공유할 지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도



나올 텐데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후 공부할 거리도 장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안내를 드렸습시다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심도와 성격, 두 번째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오바마노믹스의 실체, 세 번째는 한국경제로 돌아와 MB노믹스의 실체와 함정, 그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B노믹스를 넘어서’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장상환 선생님께서 오늘의 논의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정부의 정책 방향,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역사적인 큰 흐름과 우리의 특수한 포지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적 흐름을 보았을 때, 1929년 대공황은 규율되지 않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즉 독점과 금융자본의 힘, 소득분배의 불평등 등이 너무 심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가가 개입해 소득재분배를 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확립되었습니다. 그 뒤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맞이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자본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공급주도 경제학이 득세하면서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을 예측함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정도의 충격이 될지, 실물경제와 맞물려 대공황 시절의 충격을 줄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의 등장도 그러한 징후라고 봅니다.

고삐 풀린 시장의 끝은 어디인가?

장상환 먼저 미국 금융위기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90년대 후반과 달리 2000년대에는 급등하면서 거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팽창 등 금융제도의 변화입니다. 부채로 자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고 레버리지(leverage: 차입투자)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두 번째는 초저금리를 유지했던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주택정책입니다. 유럽국가들처럼 저소득층에게 주거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금융을 용이하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화근이 된 거죠. 독일의 경우 주거보조금을 통해 렌트 컨트롤(rent control)을 하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실질주택가격이 14% 하락했습니다. 집을 살 유인이 없으니까 금융자본이 들어와도 집값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재정을 통한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해 많은 함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실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비가 주는 등 미국의 소비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타격을 받는 등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에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가지요. 이명박 정부는 아직 복지국가가 확립되지도 않았는데, 감세 등의 정책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복지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상황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 양자의 관계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나를 판단해야 하고, 우리의 대안적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면, 글로벌 위기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경우 특히 금융부문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문에 미분양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조선업, 자동차, 전자 등 핵심수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실물경제의 악화에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검토해보니, 미국발 금융 위기 이전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금융문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리인하 쪽으로 가는데, 저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는 주택거품을 일으키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대책의 기본 방향을 이야기하면, 금융문제 대책에 있어, 그 방향이 하나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안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갔다가, 며칠 전에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채무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돈을 넣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유럽에서 사용되었는데, 미국도 따라갔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경기진작효과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이번에 완전히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여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약해져서 힘의 관계가 바뀌었고, 개혁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금융자본 권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은행을 국유화해야한다

장상환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자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자본에 족쇄가 너무 풀려서 엉망이 되었는데요, 은행은 원래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해외에서 차입을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를 위한 일시적인 은행 국유화가 아니라, 영구적인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단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는데,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벌·노동 개혁의 문제가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은 단지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금산분리, 노동권 강화 등도 시행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가 공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금융자본을 규제했습니다. 특히 모건(Junius Pierpont Morgan) 같은 재벌이 금융을 기초로 해서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우리도 기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 기업 내의 시야에만 머물러서 양보교섭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복지국가가 확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더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의해 약화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있고, 우리도 이 기회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천 장상환 교수님께서 미국 위기 부분을 잘 개관해서 짚어주셨고, 한국 부분에서는 논의들을 조금 구분했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현재 단기 경기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미래의 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뒤섞여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상환 교수님은 주로 단기 대책에 집중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MB노믹스도 그렇고 대안도 그렇고 조금 나열적이고, 전체를 꿰는 그 무엇이 빈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까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와 오바마노믹스의 성격을 중심으로 초반의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논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전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약간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 이번 위기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를 금융위기의 성격에 국한해서 볼 것이냐, 실물위기와 결합된 경제위기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30년대 공황,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은 제3의 불황(the third slump)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질서의 모색과 관련하여 단순히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금융질서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본시장 중심적인 틀을 은행 중심적인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파생금융상품의 세계가 열렸는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막아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국가 레벨을 넘어서 시야를 넓혀 위기의 세계적 규모의 파장을 보아야 한다, 달러 패권체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불균형이 새롭게 조정될 때 그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먼저 이정우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저는 먼저 이번 금융위기의 성격, 심도 그리고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고,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슬레징거란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은 대충 30년 정도를 주기로 이념적으로 좌와 우로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에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던 미국의 케인



즈주의가 석유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종말을 고하고, 1980년 레이건노믹스로부터 시작된 체제가 케인즈주의의 반대 쪽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년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종말을 고하는, 말하자면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레징거의 예언이 맞다면 다시 또 왼쪽으로 거대한 요동을 치는 그런 단계의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은 규제 완화와 감독 태만에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핵심인 CDS(Credit Default Swap)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10년 사이에 전 세계에 뿌리를 번져가지고 지금은 60조 달러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결국 AIG라는 보험회사를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고요. 워렛 버핏이 대량살상 무기라고 이름붙인 것이 바로 이 CDS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의 사적인 계약이니가 정부가 관여할 바 없다’고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것이 미국 금융당국의 태도였고요. 그렇게 방치한 결과 이것이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후폭풍을 몰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주택모기지가 CDS와 결합되면서 더욱 더 큰 파장을 갖고 온 것인데요. 지금 심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대체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한 10%는 더 떨어져야지 이것이 거의 하락을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불황이 불가피하고, 경제예측에 의하면 낙관론자는 내년 중반쯤까지 갈 것으로 보고 비관론자들은 내년 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낮게 보면 7%, 높게 보는 사람은 9%까지 가고, 실물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글로벌 경제 위기

오바마 당선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미국민의 심판

이정우 오바마의 매우 압도적인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지난 28년간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고, 특히 서민 중산층들은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소수의 부자들은 감세 덕분에 떼돈을 벌고, 특히 금융부문에서 스톡옵션이다 뭐다 해서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기실적주의에 빠져서 한 건 올린다고 한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전부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상제도 자체도, 금융혁신과 더불어 예전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 대기업의 사장은 노동자 봉급의 30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0배도 안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대기업 사장들은 노동자 평균의 400배를 받아 갑니다. 거기다가 스톡옵션이라는 천문학적인 보너스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사로 반칙을 하고 규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다 하다 결국은 파국에 이른 것이라고 봅니다.

오바마는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만능주의가 가져온 이 재앙과 반대 방향으로 꽤 움직이리라 생각합니다. 공화당의 감세정책이 낳은 쌍둥이 적자도 클린턴이 그랬듯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성장률도 공화당 때보다 아마 조금은 높아질 겁니다. 2차 대전 후의 역대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기의 경제성적도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화당은 성장률도 낮고 분배도 나쁩니다. 민주당 때는 성장률이 비교적 높고 분배가 개선되는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먼이 『진보파의 양심』(국내 번역서 제목은 『미래를 말하다』)이라는 책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미국 국민이 심판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오바마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한두 해에 끝나지 않고, 슬레징거의 예언이 맞다면 한 30년 정도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케인즈주의의 부활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거 케인즈주의보다 더 진화된 케인즈주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과거 케인즈주의보다 조금은 더 왼쪽 정도에 있는 모델로 접근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천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는 오바마의 진보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는 쪽은 이전 클린턴하고 큰 차이가 있겠냐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창환 교수님 말씀 해주시죠.

투자은행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전창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미국경제 위기와 미국의 금융자본의 재편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20세기 초부터 1929년 말 정도까지가 1차 금융자본주의 시대고, 1차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했던 자본은 J.P. 모건입니

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함께 하면서 그 지분을 기초로 해서 대기업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대공황으로 이어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1차 금융자본주의가 몰락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유동성과 단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자본한테 권력을 넘겨서는 더 이상 미국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소위 말하는 뉴딜이나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케인즈주의 정책의 핵심은 복지국가가 아니고 모건에 대한 금융규제입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에서 한 60년 동안, 짧게는 1930년대부터 한 1970년대 중반까지 금융자본의 두 손을 제한적으로 묶는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그것을 미국식 경영자 자본주의나 포드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드주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아니고 경영자 자본주의, 그 다음 금융자본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대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은행은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Citi Bank, BoA(Bank of America), J.P.모건이 전부다 상업은행을 기초로 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입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와 같은 모건 계통은 30년대 뉴딜 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같이 섞여 있어 폐해가 막심해서 미국정부가 J.P.모건을 쪼갬 겁니다. 그랬는데 금융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상업은행들이 영업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특히 60~70년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미국 경제의 고령화라든지 연금수요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자본시장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단계가 마련되면서, 투자은행이 분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투자은행은 돈을 많이 버는데 상업은행은 그렇지 못하니까 미국의 월가(Wall Street)가 로비 등을 통해 국제적인 단기자본 규제들을 다 풀어헤치는 과정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이나 동아시아 국가는 아예 그게 안 되니까 외환 금리를 연결시켜서 금융에 무장해제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와 금융화가 같이 가는 구조고, 이 구조는 투자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이 미국 전체를 일정하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제였습니다. 이번 위기는 그 구조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환 선생님은 투자은행 시대가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미국연방제도이사회(FRB)에 신청해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릴치는 굉장히 덩치가 큰 투자은행이었는데 BoA에 인수되었고, 베어스턴스는 J.P.모건에 흡수되

었습니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들 중에서 남아 있는 투자은행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투자은행 1, 2위는 은행지주회사로 가고, 나머지 3, 4, 5위는 은행지주회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은행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은행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한 20~30년 동안은 역시 연금, 자본시장, 뮤추얼펀드, 파생상품, 주식채권, 파생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금융자본주의의 물질 기반이 굉장히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투자은행의 취약점은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서 신용을 창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조달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투자은행이 은행지주사로 바뀌게 되거나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더 좋은 자금조달 능력에 기초해서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마바에게 케인즈주의적 금융규제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전창환 오바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가 재무부 장관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70년대 말에 신자유주의 전환을 가져온 핵심인물인 폴 볼커, 그 다음에 서머스 또한 IMF 외환금융위기 때 클린턴 정권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정책 쪽은 혁신적 개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 관련해서는 케인즈주의적인 금융제어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금융위기의 핵심은 대출채권의 증권화,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CDS입니다. CDS가 지금 62조 달러가 됐는데, 이것이 서브프라임과 얼마나 엮여 있는지를 미국은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 금융위기가 얼마나 갈지는 이 CDS와 CDO의 평가절하(write-down)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

국 당국도 CDS나 CDO의 평가절하(write-down)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더 심해지면 위기가 훨씬 더 오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금융위기의 회복과 관련하여 결국 집값의 회복이, 빠르면 2010년 5월 정도에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CDS와 CDO의 평가손도 안 생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 실물 비금융제조업도 금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GE도 비행기의 핵심 엔진을 만들고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사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물제조업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텐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을지 조금은 암울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병천 고맙습니다. 전 교수님 덕분에 이번 미국 경제위기의 성격과 역사적 위치에 대해 시야가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럼, 정성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진 먼저 장상환 선생님이 발표하신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되면 어떨까 합니다. 세계경제위기의 배경이나 그 전사(前史)에 관한 논의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세계경제위기는 무엇보다도 1970년대에 이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 이윤율의 장기저하와 같은 구조적인 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보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대공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도와 파장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기를 그냥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 명확하게 경제위기라고 표현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후의 가장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했던 73, 74년 위기, 82년 위기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과 공통성입니다. 장상환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미국의 소득불평등의 수준이 대공황 직전의 수준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유사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30년대 대공황 때에는 그 직전의 이윤율이 높은 수준에 있었고, 오히려 상승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주가대폭락과 함께 30년대 대공황이 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는 70년대 이후 시작된 장기적인 이윤율의 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자본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 외에 자본 외부의 한계 이른바 피크 오일이라든지, 생태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출구 없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경제위기로 봐야

정성진 오늘날에는 30년대 대공황 이후 형성된 FRB, 중앙은행, 정부의 거시경제조절 등이 기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대공황이 재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의 각국 정부의 대응은 임시변통식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기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붕괴나 파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하는 법이 없죠. 오직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의 혁명적인 고양을 통해서만 붕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반자본주의 대중운동의 수준이 혁명적으로 고양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자체의 파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권과 관련해서 차기 미국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료들은 클린턴 3기 내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거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램 이매뉴얼(Rahm Israel Emanuel)이라는 사람은 시온주의자로서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고, 국책 모기지 회사 프레디맥 이사를 지냈습니다. 재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콜린 파월(Colin Luther Powell)은 어떤 자입니까? 부시 정부하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대량살상무기를 후세인이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오바마 자신이 말하는 정책들을 봐도, 당선되기 직전에 폴슨(Henry Merrit Paulson Jr.)과 버냉키(Ben Shalom Bernanke)가 마련했던 7천 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대중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구제법안에 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라크 철군은 찬성하지만, 아프가니스탄으로 군대를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바마의 정책은 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 개혁적인 자본주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껏해야 ‘인간의 얼굴을 한 제국주의’에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루스벨트의 뉴딜이라는 것은 사실 아래로부터 노동자 대중의 거대한 고양, 당시 미국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의 투쟁, 압력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노동자운동 진영을 비롯해서 좌파를 비교하면 3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보진영의 과제는 오바마의 자본주의 변화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반(反)자본주의, 탈자본주의 대안을 추구하는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다면 오바마의 정책은 결코 개혁적일 수 없고, 즉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병천 위기의 성격과 오바마노믹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래디컬한 포지션에서 비판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봐야 한다면, 오바마의 정책은 인간의 ‘얼굴을 한 제국주의’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셨어요.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다음에, 조원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조원희 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정우 선생님이 규제 완화와 감독문제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사태진단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그 자체가 실물과 무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실물로부터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빨아들여서 자기이윤을 만드는 금융화, 이것을 통한 금융 우위의 체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은 자립화하는 순간 어떤 것이든 수익추구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금융자본은 신자유주의로 궁핍해진 일반 서민들에게도 접근했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기회가 없으나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이득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대출은 더욱 증가하고 계속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사실 버블이 없는 방식으로는 금융자본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금융시장으로 유인해서 돈을 벌수가 없었습니다. 즉 침단의 금융은 가장 타락한 자본주의의 모습, 신종 고리대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의 끝은 허무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고갈되었고 거품은 붕괴되었습니다. 언제 가난한 사람들이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전대미문의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립화된 또는 퇴행적인 금융자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감독의 완화가 아닌 금융화 그 자체가 위기의 원인

조원희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자산시장이 라고 하는 것은 케인즈 책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일반가계가 소비와 관련되어서 금융 버블에 연계된 적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구입이

일종의 투자가 된 것입니다. 국민회계에도 투자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투자주체가 가게가 되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차 같은 내구소비재를 구입하죠. 기업은 5년, 10년, 20년 동안 나올 수익을 생각하면서 투자행위를 하는데, 금융자본주의 아래서는 가게가 과거 기업이 했던 것과 똑같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케인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다. 기업의 미래 수익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수요는 항상 불안전하다. 그래서 경기가 불안전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 이제 그 규모로 볼 때 투자수요의 약 2배 또는 그 이상을 접하는 소비수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타격을 입고 그것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위기가 실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 알 수 없습니다. 파급의 메커니즘도 모르고 경로 자체도 모르고 규모 자체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번의 위기가 공포스럽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60년대 미국은 금융산업이 기업이익의 2%를 점유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40%였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금융산업이 중심산업이 되면서 금융산업의 이익을 미국도, 영국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는 백인 속에 들어간 한 명의 흑인일 뿐이며, 클린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월가에 가까운 사람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제를 안정화해서 금융이 잘 돌아가게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미국, 영국의 이익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 간의 이익은 일치하기 힘들며 현 위기의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 해결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이익을 보는 하나의 합의점은 도출되진 못할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곧 철군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비지출은 전 세계 군비지출로 봤을 때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는데 1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신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쥐어짜서 돈을 벌거나, 외국에 군사적 위세를 보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조 달러에

해당하는 군비를 5천억 달러로 반만 줄여도 몇 년 내로 수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와 금융부문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오바마 할아버지가 나와도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천 홍 교수님, 본의 아니게 발언권을 늦게 드려 미안합니다. 김 씨, 이 씨도 있는데, 왜 홍 씨 성함을 가지셨는지요.(웃음)



홍종학 몇 년 전부터 제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 진경련 쪽에서 재벌을 인위적으로 개혁한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없는가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1920년대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미국도 재벌을 인위적으로 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에서 1920년대 미국을 보다 보니까

이 시기가 한국과 너무 똑같습니다. 1920년 이전을 ‘진보시대’라고 하는데, 재벌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재벌이 막강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수시대’라고 하는 1920년대로 들어섭니다.

1920년대와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20년대와 1990년 이후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세계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 미국의 후버(Herbert Clark Hoover)가 8년간 상무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1929년도에 대통령이 되지요. 그리고 그 12년간 앤드류 멜론(Andrew Mellon)이 재무부 장관을 하는데, 손꼽히는 재벌의 한명이었습니다. 재벌의 총수가 재무부 장관을 12년 했다고 하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잘 활용하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친기업주의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후버리즘입니다.

1920년대 기업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기업조직을 국가조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이지요. 앤드류 멜론은 감세와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의 신봉자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리고 이전 진보시대 때 만들어졌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10년의 결과가 장상환 교수님도 말씀하신 소득분배의 악화입니다. 미국이 진보시대가 끝나고 친기업적 시장만능주의시대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대공황이 터진 것이구요. 그 상황이 뉴딜 정책에 의해서 안정화되었다가, 이 안정화가 80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레이건 당시부터 규제완화, 감세와 같은 친기업정책과 시장만능주의로 되돌아가면서 28년 후인 오늘날 소득분배가 1929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터집니다. 놀라운 역사적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세계화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득분배가 악화되니까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유효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경제는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계화에서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신축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니까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는 것이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기업 정부는 경기부양을 하게 되고 어디에선가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비이성적 과열입니다. 1920년대에도 엄청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었던 것이지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는 시장만능주의 맹신에서 비롯된 닳은 꼴

홍종학 엄청난 거품에 대해서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최근의 위기를 보더라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7, 8년 전부터 이미 이야기했었죠. 3, 4년 전부터는 경제학자들도 슬슬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야기를 했

었죠. 그러나 1920년대 자유방임주의와 2000년대 시장만능주의는 이러한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견을 다 묵살했습니다. 그 린스펀도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으면서도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 중앙은행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식이지요.

바로 이렇게 가공의 거품을 일으켜서 쇠퇴해가는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따라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주어야 하는데, 1920년대에는 그 주체가 재벌이었다면 오늘날은 금융산업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금융산업이 엄청나게 비대해진 것이지요. 2000년대에는 미국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하는 시기였는데 말이지요.

결국에 가서는 어떤 나라든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안전장치가 열 개 쯤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수백 번 쯤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 정부에서는 대개 10개의 안전장치 중에 5개 정도를 없애지요. 그래도 나머지 5개가 있으니 안전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럼 나머지 5개도 자동으로 무너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던 투자은행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 2004년도에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이 바뀌면서 촉발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규제를 풀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사람이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던 폴슨입니다. 당시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 한쪽에서 규제를 푸는 대신에 SEC에서 감독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폴슨은 2년 후에 재무부 장관으로 가고, 가장 친기업적인 인사가 SEC의 새 의장이 됩니다. 지난 4년간 5대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트리클 다운’(Trickle-Down) 대 ‘보텀 업’(Bottom-Up)의 문제입니다. 결국 친기업 정부, 시장만능주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트리클 다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까 세금을 깎아서 부자들에게 돌려주고, 경제가 어려면 또 경제가 어려워니 세금을 깎아주자고 해요. 그래야 열심히 일한다

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가 좋으나 어려우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후버도 지금처럼 금융기관에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트리클 다운을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폴슨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금융기관은 그대로 놔두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만 사주자고 했어요. 이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다’라는 말도 나오고, 경제학자들이 대거 나서서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수정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완전 폐기했죠.

‘친기업적 시장만능주의, 또 이에 근거한 트리클 다운에 대한 맹신은 반드시 경제위기를 가져온다’ 이것이 1920년대와 최근 두 시기의 명확한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병천 지금까지의 토론을 통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아주 이해가 풍부해졌습니다. 상당한 견해 차이도 확인을 했구요. 공부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넘어와서 MB노믹스의 위험과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2. 한국경제의 진로

더 대담한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자

문진영 지금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장상환 교수님의 “우리는 복지국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유주의가 그대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취약하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지에 대한 토대도 없고,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적인 하중이 우리나라에 밀집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정권은 역주행을 하

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미세조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위기를 경험했던 사례, 2차대전 직후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당시 유럽의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럽사람들이 느꼈던 위기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컸던 걸로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2차대전 이후에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과 같은 소위 자본주의의 '5대 악(惡)', 이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하였고, 그것이 1948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민건강보험)로 완성되면서,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가 왔을 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지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어서 나름대로 제도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인 생계권, 교육권, 주거권, 문화권, 노동권의 내셔널 미니멈을 정하고, 그 내셔널 미니멈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베버리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강하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경제위기 충격을 받을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화가 되었고, 비교적 사회가 투명화되었고, 민주진영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정책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답이다'라는 이야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이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천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가 복지국가의 태동 조건이었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복지국가를냐를 고민해야 할

다고 하였고요, 홍 교수님, 이번에는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확하게 위기의 코스로 가고 있다.

홍종학 1929년의 후버리즘과 1980년 이후의 레이거노믹스, 이론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배경은 공통적으로 친기업주의하의 정실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위기든지 그 원인은 정실자본주의에서 온다고 봅니다. 97년 경제위기의 원인도 정실자본주의였고요. 이명박 정부는 바로 정확하게 그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똑같습니다. 강 부자 내각이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를 무력화시킨 것도 1920년대와 똑같습니다. 1930년대 또 하나의 변형이 파시즘이었는데, 지금 난데없이 ‘미네르바’를 가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역사가 가르쳐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환 교수님께서 이자율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이 약간 논쟁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금리를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상환 교수님이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의 취지에 모두 동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경색과 유동성부족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파이프가 끊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넣어봐야 돈은 안 내려갑니다. 현재로서는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프를 연결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돈을 풀어봐야 기업들에게는 돈이 안 가기 때문에 시중이자율은 내려가지 않으면서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이 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천 금리 정책에 대한 논란은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쉽지 않은데 홍 교수님 참 용감하십니다. 저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금리만 가지고 토

론회를 한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말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드러났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세, 작은 정부, 규제완화, 금산분리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것은 레이건과 부시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에 불을 질러 양도세 깎아주고 종부세 죽이고 해서 옛날에 좋았던 토건국가로 돌아가자는 사고방식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연결되어 있고요. 어제 현재가 종부세를 거의 죽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후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한국경제가 우왕좌왕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30년간 박정희 모델이라는 철저한 관치경제가 있었고 IMF 환란 후에 지난 10년간 시장만능주의로 치달아왔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두 개의 틀린 답이 마치 정답인 듯이 도처에 혼합되고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올바르게 진단 못하고 때로는 토건국가라는 전형적인 박정희모델로 가고 싶어 하고 때로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감세해서 레이건·부시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둘 다 틀린 노선입니다.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항해치곤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하느냐?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럽형의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사회민주주의, 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반박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될 법하냐, 공상이다. 그러나 살 길이 그거라면 멀어도 북극성을 좌표로 삼아서 몸부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희 모델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한국형 제3의 길을 찾아야

이정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대선

에서 압승을 거둔 것도 항상 '잃어버린 10년'이다, 좌파가 경제 망쳤다고 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집권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해놓은 일관성을 버리긴 어렵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말에 따라서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건 실패로 가는 것이죠. 부시가 클린턴을 부정하고 뭐든지 클린턴으로 가진 않겠다고 해서 ABC(Anything But Clinton)로 가다가 망하고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그대로 이명박 정부가 가고 있는데, 이걸 바꿀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바꿀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인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망해도 좋다고 해서 그냥 갈 겁니다. 이념이 덧이 되어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고통의 과정이 짧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 국민들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좌파 우파 이념의 덧에 빠져서 제대로 잘 못 보고 우파가 경제를 살린다고 보고 좌파가 경제를 망쳤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을 찍은 결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레이건, 부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배워서 오바마를 당선시켰는데, 한국은 과연 그런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저는 이 국민학습기간이 제발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레이건, 부시 같이 20년 가는 최악의 참사는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 이 교수님께서 우리가 학습중이라고 하셨고, 앞서 북극성을 좌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경제위기도 길게 갈 테니, 모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원희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2007년 초부터 정부에서 이른바 DIT 규제를 실시하여 고삐 풀린 말처럼 뛰어 오르는 부동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금융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둘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노무현 정권 때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자통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자통법이 시행되고 2년 정도만 지나 위기를 맞이했다면 아마 우리는 제2의 IMF위기를 벌써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자통법은 당장 시행이 중지되어야 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금융지배가 아니고 생산이 중시되는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에서 사람들이 일하려 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높여야 하고 생산성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저지해야 합니다. 홍중학 교수님은 한국 중소기업이 너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복지국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좌파의 재정립』이란 책이 두 달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담세율을 30%에서 5%씩 올리고 또 5년 뒤에 35%에서 5% 올리고 해서 35~40%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진국되는 길이고, 모든 것이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딜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실현된 것

정성진 현재 위기의 진단과 대안 논의가 금융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 현재의 위기는 단지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미 전체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자본주의만의 위기가 아니라, 유럽형 자본주의도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전에 이미 실물위기의 불황이 먼저 심각하게 진행되

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틀 내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자본주의의에 대한 탈자본주의에 대한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 결국 체제에 봉사하는 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케인즈와 민스키 같은 대안들은 결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에서 고통 받는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론이나 대안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국민경제적인 관점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경제적인 관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IMF위기 때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발목을 잡았던 중요한 뒷이었는데 말이지요.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계급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경제라는 것이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창환 오바마와 민주당이 훨씬 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오히려 공화당이 재계의 CEO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1920년대 말과 같은 금융규제를 기대하긴 불가능하다 봅니다. 우리로 돌아왔을 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영미자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라기보다는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도, 유럽의 독일모델도, 북구모델도 안타깝게도 은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나 금융을 키워서 자본시장 관련된 돈벌이를 키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과연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적 시장경제와 금융자본주의가 양립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연기금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진영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천 전창환 교수님이 큰 이야기를 던져주셨네요. 지금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위기고 파탄에 빠졌다고들 하지만, 유럽도 그 길을 쫓아가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그리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 민주적 대안에 대해 더 고민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널 분들 말씀이 끝났는데, 장 교수님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토론을 듣고 꼭 하실 이야기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장상환 전창환 교수께서 투자은행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증권매매알선 등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역할은 계속되겠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단기자금을 자신의 신용으로 빌려 장기투자하는 영업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투자은행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신용경색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효과가 없는 문제를 홍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금리를 올렸을 때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대출받은 사람들한테까지 전달된다는 거죠. 저금리 정책을 쓰더라도 신용경색으로 그 효과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공적 신용을 투입하는 등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감세, 규제 완화, 공공부문 사영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다수 미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오바마의 경제팀에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경제스태프들도 금융체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문제가 많은 현재 형태 그대로 끌고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다수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이 신자유주의체제에 적응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대신에 어떠한 체제와 정책을 수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어 가면서 대중들의 의식도 바뀌어갈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정부의 비중이 아주 낮은 나라 아닙니까? 일상

생활이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고, 민간의료보험도 사실은 금융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감세가 그걸 부추기고요. 세금 감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신용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민간 연금보험, 의료보험, 약 구입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자본이 이윤을 올리는 것이구요.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를 탈시장화의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불안정이 결국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의 사회화가 중요합니다. 그 거점이 은행이니 앞으로 은행의 국유화가 본격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의 헤게모니를 아주 강하게 통제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천 예, 장 교수님 고맙습니다.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대안 문제로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최근 은행 국유화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지,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진보적 구조조정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등등이 쟁점거리입니다. 오늘 논의된 것을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요, 오전에도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신 경제 질서로의 전환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급주도 경제학 자체의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경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수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공급, 수요 측면을 함께 통합하는 새 경제학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견해가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책 체계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복지라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수요 중심 케인즈주의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연 어떻게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같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경제의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화두

로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위기상황입니다. 그러나 출구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칼 폴라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기의 출구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뉴딜적 형태도 있었고, 국가사회주의적 형태, 파시즘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통찰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한국에서 위기는 어떤 출구를 열까요, 어떤 조건과 힘이 진보적 출구를 가능케 하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져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